

정부 무관심 올림픽 식수대란 불가피

전용저수지 동계특별법 시행령 지원 대상서 제외 ... 국비 지원 불투명 실시설계 중단

국비 70% 이상 지원 안 되면
도 예산으로 자체 추진 불가능
2017년 프레대회 차질 우려

2018평창동계올림픽 필수 시설인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실시설계가 중단, 소극적 국비 지원에 따른 대회 준비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는 국비 확보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지만 내년 정부 당초예산에 사업비 반영이 안 되면 2017년 2월 열리는 프레대회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대관령 식수

전용 저수지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했지만 이 사업이 최근 공포된 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의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중단했다.

도 관계자는 “식수전용 저수지는 국비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으로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에 들어갈 총 830억원 중 70% 이상은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년가량 걸리는 실시설계 중단에 따라 도가 당초 2016년 말로 계획했

던 저수지 완공시기도 차질이 우려된다. 도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시작되는 이 저수지의 본공사 기간을 2013~2016년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국회를 통과할 정부의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서도 국비 지원 여부 및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2016년 말 완공은 불투명하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사업비 10억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식수전용 저수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며 국비 지원 불가능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현재 1일 최대 4,000톤인

대관령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 능력을 1만5,000톤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림픽특구 지정이 확실시되는 이 지역은 대회 전후에도 생활용수 사용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올림픽특구에는 외국인 거주지, 외국인 전용학교, 스포츠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특구 주변지역에서도 대규모 관광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올림픽특구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 추진도 어려워진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SOC “SOS”

도내 도로·철도 등 SOC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며 도 정치권이 비상이다.

24일 도 정가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안 2차 심의 중이며, 기재부의 입장이 완강해 도 SOC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부처 정부 예산 반영 완강히 거부
에서 올라간 예 내년 도내 도로·철도 빨간불
산안대로 9월 도 정치권 기재부 강력 압박
중순 확정되면 내년도 도 SOC

사업의 순항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양양 구간) 내년 예산은 1,347억원만 배정돼 실질 소요액 3,000억원보다 적다. 동해고속도로 단절 구간 역시 고작 817억원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 조기 완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역시 1,800억원이 필요하지만 1,000억원만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도 38호선(제천~동해 간

확·포장)은 732억원이 반영돼 필요액 840억원보다 100여억원 적고, 국도 35호선(태백~강릉 확·포장) 역시 180여억원만 반영돼 소요예산 220억원보다 40억원이 적다. 이 밖에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신축을 위해 내년에 필요한 20억

여원도 현재까 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정치권은 이에 결산심사

와 부처 방문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으로 전방위로 뛰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위 결산심사에서 국도 38호선 확장공사의 조속 완공을 위한 추가 예산 책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음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도 SOC 예산 책정도 주문할 방침이다. 서울=민왕기기자